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40
----------	------

제출연월일 : 2017. 5. 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지원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마. 협의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바. 협의회 지원(안 제12조)

3. 근거법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 조 례 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2017. 3. 13. ~ 4. 2. (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구청장은 구민·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구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협의회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시군구 『자치분권 조례』 제정 현황

□ 제정 현황

○ 제정완료 : 73개 시군구

시 도	시 군 구
서울 (6)	노원구, 강동구,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대문구
부산 (13)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북구,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
대구 (8)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인천 (7)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옹진군, 계양구, 부평구
광주 (5)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대전 (3)	서구, 유성구, 동구
울산	
경기 (6)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오산시, 양평군, 안양시
강원 (3)	속초시, 강릉시, 춘천시
충북	
충남 (8)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입법예고 : 천안시)
전북 (1)	김제시
전남 (10)	순천시,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광양시, 해남군, 목포시, 완도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 (1)	안동시
경남 (2)	통영시, 사천시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13개 시군구) : 서울 노원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수원시, 오산시, 아산시

의안 번호	1340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일 자 : 2017. 5. 2.(화)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5. 8.(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5. 12.(금)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지원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3)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4)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5) 협의회 설치·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6)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다. 근거법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